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거점 – 민주시민교육과 생활정치의 변화

연구소 교육기획부가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노동 · 시민단체의 교육관련 활동과정을 분석하고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책임자인 한숭희교수(서울대 교육학과)를 비롯하여 참여연구팀 15명, 연구지원팀 7명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한숭희(서울대 교수, 교육학)

어느 사회나 정치사회화는 존재한다. 알튀세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정치사회화는 국가의 통치 기제로서의 물리적 통제(경찰, 군대, 감옥 등)와 함께 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학교, 언론, 홍보 등)의 과정이자 내용이다. 해방 후 권위주의적 국가는 과도한 수준에서의 물리적 통제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중심의 정치사회화에 저항하는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오는데 성공(?)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양대 이념 축을 통하여 국가중심의 정치사회화를 수행해 왔다.

해방 후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는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사회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반사회화(counter-socialization)를 통하여 시민담론과 참여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일련의 집단적 대응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시민'이란 민중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한편에서 그 역사는 (1) 동일한 국민이지만 그 권리와 혜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민중을 의식화의 주체로서 구분해 내고, (2) 그들의 집단적 담론 형성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폭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종의 민중의 대항 헤게모니 혹은 대항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3) 최근 확보된 '상대적 자율성'에 터하여 1987년 이후 합류한 중산층 생활운동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사회를 견제하는 시민운동의 중심축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함께 관통하면서 이루어져왔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주체의 차이라기보다는 상황과 대결구도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전체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수행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민중교육의 바탕이었던 민중운동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대항한 비합법적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이러한 노력은 국가담론과 구분되는 일종의 시민 공공영역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 때부터 확보된 공공영역을 보다 확장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민운동이라고 부른다. 결국 최근의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교육은 민중교육의 역사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천착했던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사회운동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사회를 견제하며 새로이 시민담론의 영역을 창출해 내었던 전반적 흐름 안에서 민중 혹은 시민 주도의 교육이 수행해

왔던 궤적이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은 이러한 민중교육과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 묶어 구조화하고 그 이론 틀에 의거하여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시민교육의 현주소를 이해하려는 일련의 시도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고, 6명의 시민교육전문 실천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자와 정민승 교수(한국 디지털대학)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전공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지원팀이 되어 연구의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부정기적 참여 및 자문, 면담 등을 통해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 전문가들 약 15명이참여연구자로서 도움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을 비롯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담회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 여성, 미디어, 노동, 환경 등의 전문분야별로 1~2회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비공식적인 아이디어 회의 및 전문가 개별 면담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또한 각 공동연구자들은 소속된 시민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현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고민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번 연구는 교육실천가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워크숍과 집담회를 모두 비디오로 녹화하고 녹취하여 질적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검토하는 참여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2002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고 연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미비함과 오류의 가능성은 다른 측면에서 향후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을 위한 지평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을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시도하였다.

첫째,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 자체의 다양한 가치, 내용, 대상, 주체, 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적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혼란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합적인 개념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이 나타나기 이전 한국사회의 '구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 성장해왔던 민중교육과 노동교육이 시민교육과 어떠한 운동사적, 교육적 지형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실천현장의 각 장면에서 시민사회단체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목적, 방법, 성과, 내용 등과 관련된 쟁점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현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민주화운동의 전체 맥락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심각히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세부 분야별로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향방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관한 이론화는 대부분 청소년기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지, 시민사회 구축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비판적 성인교육의 장면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탈근대주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속에서 그에 부응하는 교육목적, 대상, 방법, 양식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국가 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함께 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더불어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으로서 향후 생활정치 안에서의 민주화운동의 핵심 분야로 성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비록 민주시민교육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이념이 이상적인 상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천현장에서 발견

되는 문제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 교육실천과 관련된 구조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 인간중심보다는 조직중심의 교육이다.
· 교육의 목표, 위상이 불분명하다.
· 교육사업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론 및 교육양식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 내용영역별 구분을 넘어선 의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이 시민사회를 형성, 방어, 구성하는 교육이며, 그 중심에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일상적인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으며, 시민운동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라는 사실에 동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이분법적인 경계구분을 지양하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지식구성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10단계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1. 개별 시민단체에서 교육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2. 의제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범시민 교육연대 지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상설화해야 한다
4. 내용영역 중심에서 의제중심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
5. 교육방법론과 새로운 교육양식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6. 시민평생학습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7. 민주시민교육 지원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8. 중간 리더쉽을 키워야 한다
9. 시민중간리더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고, 학습동아리를 시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10. 시민사회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를 마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동의한 내용은 향후 민주시민교육이 그 자체의 좁은 영역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평생학습사회라고 하는 거대 흐름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학교교육 중심사회로부터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칫 인적자원개발(HRD)이라고 하는 도구적 교육개념이 평생학습사회를 독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것은 결국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하버마스가 지적한 도구적 합리성이 삶의 영역으로서의 교육을 도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교육 영역에서 구조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은 한편에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키워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를 시민의 삶과 배움이 직조해 내는 시민담론의 형성과 성장의 장으로 전화할 수 있는 중심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향후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라는 교육의 과제를 시민사회형성이라는 범사회적 과제와 연결시키게 되는 것이다.

정치수배자 사무실 개소, 수배해제 활동 본격 나서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과 가족들이 직접 나서 '대통령 특별사면'과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달 6일(목)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9일(일)의 '1차 전체 정치수배자 총회 및 온라인 모임'에 이어 10일(월)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면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할 때를 놓치고 있는 대학생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190명이나 된다"며, "노 당선자가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수배 7년째를 맞는 유영업(97년 한총련 권한 대행, 목포대)씨는 "이후 각 대학별로 수배자 모임을 진행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2차에 걸쳐 수배자 탄원운동과 전체 수배자들의 사연을 모은 책자도 만들어 언론사와 국제인권단체들에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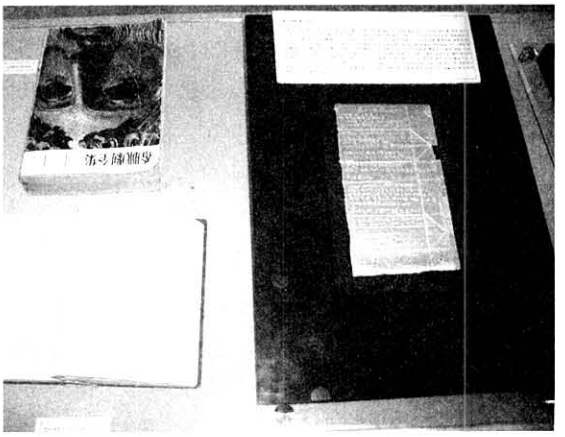
고 김남주 시인 유품전

김남주 시인 추모사업회는 지난 달 4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자미갤러리에서 '고 김남주 시인 유품 특별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달 13일(목) 김 시인의 9주기를 맞아, 그의 불꽃같은 삶과 칼날 같은 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회에는 부인 박광숙 여사가 보존해 온 육필시 모음 14권을 비롯해 수첩, 안경, 신발, 인장, 모자, 액자, 책상, 도서 등 유품 1,200여점이 선을 보였다.

김 시인은 1946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1969년 전남대 학생 시절에 3선개헌반대운동에 참여했고, 1979년에는 남민전 사건에 얽혀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온몸을 던졌다.

김 시인은 19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잿더미'를 발표하며 등단한 후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의 시집을 냈다



의문사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동 재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달 14일(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날 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보고서 발간 기념 모임'을 갖고, 내외 인사들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 발간 경과 등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 발표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로 총 2,920쪽 분량의 4권짜리 책자로 4천여 부가 유가족 및 언론사, 국공립 기관 등과 신청자에게 무료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정 및 결정문과 함께 의문사 재발 방지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51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준법 서약제 폐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상설 조사위원회' 설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인권위) 인권교육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인권길라잡이-교정편」과 「인권길라잡이-경찰편」을 발간하였다.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는 국가인권기구 등장의 배경과 인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다룬 총론, 해당 분야 실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인권쟁점들을 다룬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인권 길라잡이-교정편』은 △물리력 사용 △징벌 △건강 △외부교통과 권리 구제 △차별 및 기타사항 등을, 『인권 길라잡이-경찰편』은 △수사 △구금 △경비 · 정보 활동 △경찰 장비 사용 △즉결 심판 등의 인권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인권위가 발간한 『인권 길라잡이』시리즈는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 즉 경찰의 경우 수사보안연수소 ·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 · 중앙경찰학교 등 그리고 교정직과 검찰직의 경우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강좌가 개설될 경우,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이들 법 집행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을 위해 표준교안도 개발했으며, 향후 인권교육 강사들의 교수 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재 신청 : 02)2125-9674, meek@humanrights.go.kr

사형폐지 英대표 호지킨슨 내한 강연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 대표이자 사형문제 전문가인 피터 호지킨슨씨 내한 강연회가 지난 달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강연회에서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호지킨슨씨의 활동과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사형제 존치론 주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한 영국대사관 초청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내한한 호지킨슨씨는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 사형연구소 소장과 유럽 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많은 국가의 정부와 협력하며 사형문제 논의를 진전시키고 사형 대체 형벌을 자문해주고 있다.

한편 기독교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사형폐지 단체들은 강연회를 계기로 한국교회에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국가인권위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인권위)는 지난 1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현안 과제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가 새 정부에 제출키로 한 10대 인권현안 과제는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 제도 개선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 등 개선 △UN규약 중 미 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노동자 인권 △도 ·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 등이다.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언론인권상 수상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제1회 언론인권상 수상자로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를 선정하고 지난 달 13일(목)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 11층 한국방송광고공사 강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여론을 이끌어낸 '민중의 소리'는 지난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시상하는 제12회 민주언론상 대상도 받았다.

언론인권상 특별상은 지난 해 4월 방송된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유서대필사건'에 돌아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추진

일제 강제징용부터 최근의 의문사까지 미해결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과거사 해결을 위해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올해 초에 준비위를 구성했다.

민변은 우선 과거사청산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과 1~5년차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 활동가도 과거사 청산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 1차 네트워크 구성에 포함된 단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원회',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유가족 단체인 '추모연대' 등 4개 단체다. 민변은 4개 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갖고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들과 함께 늦어도 5월까지 청산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위한 전세계 대행진 열려

지난 달 15일(토) '2·15 국제공동 반전평화대행진'(이하 반전평화대행진)이 오후 3시부터 약 두시간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전이 임박해 오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전쟁반대'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세계 동시 집회에는 전세계에서 약 천만명 가량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00여개 민주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관으로 약 1천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라크 등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전쟁지지를 표명한 나라에서도 집회가 있었으며 자국의 전쟁정책을 비판하였다.

인종과 종교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무고한 이라크 주민과 어린이만 죽이게 될 뿐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로니에 행사를 마치고 종묘까지 행진을 하였다.

5·18재단

사랑의 옷 보내기 사업 진행

5·18재단과 광주북구청은 작년 12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수집한 의류 7,000여점을 캄보디아 여성범죄센터(CWCC)와 광주실업자지원센터(소장 정향자)에 보내기 위해 지난 달 5일(수) 5·18기념문화관내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와 서구자원봉사센터, 기념재단 자원활동가 30여명이 의류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여름옷과 겨울옷으로 분류되고 다시 성인과 아동용으로 재분류된 옷은 낱개로 비닐포장되고 다시 박스로 재포장되어 2월 6일(목) 양 기관으로 발송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경을 넘는 인간애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원 활동가 모집과 소양교육

5·18재단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2003년도 자원활동가로 지원한 27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교육을 마친 자원활동가들은 국제 문화팀, 청소년교육팀, 자료/영상팀과 웹관리팀에 배치되어 올 한해의 자원활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03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달 26일(수)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산민주공원 큰방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 평가와 재정 결산 보고, 2002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0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북한 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도 채택했다. 한편 신임회계감사에 양도성(37)씨가 선임되었다.

남부지역 6개 연구소 워크숍 개최

지난 달 10(월)부터 11일(화)까지 부산민주공원 작은 방에서 남부지역 6개 연구소(5·18연구소, 제주 4·3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관계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연구소 소개 및 사업 내용, 운영상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또한 큰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년에 두번의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